

교복가격 · 학원비의 개선 · 관리강화 방안

2026. 2. 26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서

I . 추진 배경	1
-----------------	---

II . 추진 과제	3
------------------	---

① 교복 가격 개선 방안	3
---------------------	---

②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	5
---------------------	---

I. 추진 배경

□ 품목별 동향

【교복 가격】

- 매년 물가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다음 학년도 교복 가격 상한가*를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협의결정

- '26학년도 교복 가격 상한가는 344,53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

* ['22년] 308,440원(동결) → ['23년] 314,610원(2.0%인상) → ['24년] 335,840원(6.7%인상) → ['25년] 344,530원(2.6%인상) → ['26년] 344,530원(동결)



- 시도 조례를 통해 상한가격 범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(34만원 내외) 중이나, 체육복·생활복 추가 구매 등으로 자부담 증가

【학원 교습비】

- 학원비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되다, '25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연평균 상승률 2.1% 수준

- 소비자물가(전년 대비 상승률, %): ('21) 2.5 → ('22) 5.1 → ('23) 3.6 → ('24) 2.3 → ('25) 2.1
- 학원 및 보습교육 소비자물가("): ('21) 1.5 → ('22) 2.6 → ('23) 2.7 → ('24) 2.1 → ('25) 2.1



□ 그간의 대응 경과

【교복 가격】

- 매년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교복 가격 상한가 결정, 학교주관 구매제도*('15~)를 운영하여 교복 가격 안정화 노력
 - *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·검수·대금지급 등 공동구매 주관
-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신입생 교복(동·하복 1세트) 현물 또는 현금·바우처(평균 34만원)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
 - ※ (재원부담) 교육청 전액 6개, 교육청·일반지자체 공동 11개
 - (지원금액) 평균 34만원 내외(추가 항목 구매는 학부모 부담)
- '17년 이후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행위를 한 교복 대리점 총 9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, 과징금, 경고 등 부과
 - * 공정위 시정명령 32건, 과징금 2건, 경고 7건
- 최근 높은 교복가격 논란으로, 관계부처 회의*(2.20.), 시도교육청 협의회(2.23.) 개최를 통해 교복제도 전반 점검 및 개선 방안 등 협의
 - * 교육부 차관 주재, 재정경제부·기획예산처·공정위·중기부 담당 국장 참석

【학원 교습비】

- 교육청·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조정명령을 통해 선제 관리 중이며, 편·불법 학원 점검을 통해 교습비 초과징수 제재
- '25년 학원·교습소의 교습비등 초과징수 288건 적발로 등록말소 9건, 교습정지 40건, 과태료 부과 223건(총 2.5억원, 평균 114만원) 등 조치
 - ※ 교습비 초과징수 적발 실적 : ('22) 201건 → ('23) 242건 → ('24) 212건 → ('25) 288건

< '25년 교육청 지도·점검 결과(점검 학원·교습소 87,028개소 중) >

- 편·불법 운영 적발 : 6,781개소(7.8%, 9,487건)
- 처분 : 13,135건(고발 225건, 등록말소 77건, 교습정지 249건, 과태료 2,278건 등)

- 물가안정을 위한 학원 교습비등 관리 시도교육청 협조요청

- ※ 장관 주재,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대상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 개최('26.2.12.)
- ※ 17개 시도교육청 학원업무 담당자 협의회 개최('26.2.20.)

Ⅱ. 추진 과제

1 교복 가격 개선 방안

□ 품목 전망

- '26년 교복 상한가격이 전년도와 동일한 344,530원으로 동결되었으나,
 - 지원되는 교복 외에 생활복, 체육복 등 품목 확대 및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책정 등으로 인해 학부모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
- * 【예시】 지원동하복 1set 34만 + 학부모생활복(동하복) 16만 + 체육복(동하복) 11만 + 셔츠추가 5만 등
-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품질저하 및 불친절한 서비스 등 불만 제기

□ 점검 및 개선 방안

①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

- (전수조사 실시) 전국 학교(중·고 약 5,700교) 전수조사*를 통해 학교별 교복 가격 및 선정업체 등 현황을 분석하여 가격구조 개선
 - 전수조사 결과,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, 생활복을 포함하여 품목별(티셔츠, 바지 등) 상한가 결정('26.상)
- * (조사기간) '26. 2. 27.~3. 16. / (조사내용) 품목별 단가, 입찰방식, 낙찰업체, 낙찰가 등
- (시장구조 분석·개선) 교복시장 현황과 구조, 학교주관 구매제도 운영 실태 등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(공정위 협조)
 - ※ 교복시장 참여 사업자(4대 브랜드업체/소규모업체), 유통구조, 교복가격,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('26)

②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

- (공급주체 다변화)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'생산자 협동조합'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 활성화(행안부, 기획예산처, 중기부 협조)

- 입찰시 가점 부여(지자체·교육청 조례 개정),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 제공(기획예산처·중기부), 보증·용자 지원(중기부) 등
-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·용역에 대한 공공 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 신설(행안부)
- (수요자 중심 지원) 시도교육청, 학교에서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원방법, 교복유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추진
- (편한 교복 전환)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,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고, 품목 간소화
 - * 【예시】 정장형(폐지) + 생활복·체육복(지원) + 바지·셔츠(유사 시중제품으로 대체 허용)
- (선택권 부여) 지원 금액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→현금·바우처형으로 전환 권고*
 - * (현물 지원) 13개 시도, (현금·바우처 지원) 4개 시도(서울, 광주, 충남, 경북)

③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^[공정위]

- (상시 감시 체계 가동) 집중 신고기간 운영(2~3월)을 통해 입찰 담합 등 의심 정황에 대한 온·오프라인 제보 접수
 - * 신학기 대비(2~3월) 담합 의심사례 집중 수집 및 모니터링 강화(교육부-공정위 공동)
- 교복구매 입찰 과정에서의 낙찰자, 투찰가격 사전 합의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감시 및 조사
- (처벌강화 및 현장조사) 담합 징후 포착 시 현장조사 및 수사의뢰, 적발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요청,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

□ 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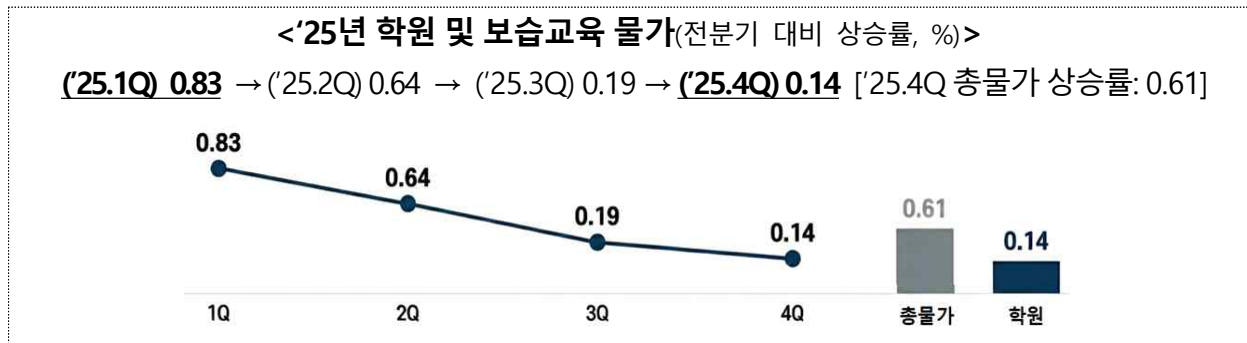
- 전국 중·고등학교 교복비 현황 전수조사(2~3월)
- 입찰 담합 등 신학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(~3월)
- 교복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(2.27.)
-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,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선방안 보완(~3월)

2

학원비 관리강화 방안

□ 품목 전망

- 매년 1분기 신학년 영향으로 학원교습비가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예상



□ 점검 및 관리강화 방안

① 특별점검 집중 실시('26.2월~3월)

- (개요) 학원 등 교습비 초과징수, 기타경비* 과다징수,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점검

* 기타경비 : ①모의고사비, ②재료비, ③피복비, ④급식비, ⑤기숙사비, ⑥차량비

- (대상) 전체 등록 학원·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등 액수가 상위 10% 이내, 최근 5년간 교습비등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 우선 선정

※ 서울·경기 등 학원 밀집지역 중심으로 주요 점검학원 선정

< 특별 집중점검('26. 2.~3.) 주안 사항 >

- 교습비 과다징수: 등록된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, 단기 고액 특강
-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: 자율학습시간 포함 교습시간 부풀리기, 과다한 교재·자료비 등
- 기타경비 과다 징수: 등록된 기타경비(모의고사비, 재료비, 기숙사비, 차량비)의 과다징수 여부,
- 기타: 교습시간 준수 여부, 선행학습 광고, 과대·거짓 광고 등

②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 운영('26.2월~)

- (내용) 신학기를 맞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등의 교습비 관련 불법사교육 국민제보 접수, 현장조사 등 점검

※ 기간 : '26. 2월 ~ / 신고처: 불법사교육신고센터(clean-hakwon.moe.go.kr)

- (신고대상) 학원·교습소·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초과징수 및 편법인상 행위, 교습시간 위반 등

③ 교습비 관련 모니터링 강화

- (동향점검) ①학원 교습비 및 초과징수 현황, ②지도·점검 실적을 격주 점검
- (온라인 모니터링)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, 인터넷에서의 교습비 초과징수, 선행학습 유발광고, 단기 고액특강 등 집중 모니터링(2.13.~3.31.)

④ 관계부처 합동 점검 추진

- (내용) 신고·제보 또는 행정처분 건 중 ①「학원법」 위반 고발, ②「표시광고법」 위반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건 발굴
 - ※ (공정위) 학원 거짓과장 광고 등 「표시광고법」 위반 (국세청) 고액 교습비, 무등록학원 등 공정세원 관리 여부, (경찰청) 무등록 학원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행위에 대한 「학원법」 위반 등 수사
- 【사례】 (23.7.)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학원등의 허위·과장광고 조사요청(10건)
→ (23.12.) 공정거래위 사교육업체 9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(총18.3억원) 처분
- (합동 점검) 교육청으로부터 점검사안을 제출받아 교육부, 공정위, 국세청 등 유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추진('26.3월~)

⑤ 제도개선

- (처벌 강화)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담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, 과태료 상향(300만원→1,000만원) 등 추진(「학원법」 제23조 관련)
- (인센티브 현실화)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*으로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(「학원법 시행규칙」 제17조 관련)
 - * (예) 초과교습비 징수 행위: 10만원 → 100만원, 무등록 교습행위: 20만원 → 200만원, 교습시간 위반: 10만원 → 100만원 등

□ 향후 계획

-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('26.2.9.~2.28.) 운영
- 교습비 관련 편·불법 운영 학원 등 특별점검('26.2.23.~4.3.)
- 학원 등 위법행위 제재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('26.2월~)
- 합동 점검사안 관계부처 협의 및 대응 추진('26.3월~)